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3월09일(월)
통권30호(제2권 제8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대화 제의? 문제는 진정성이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벌써 몇 번째 대화 제의인지, 이제는 그 횟수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더욱이 이번 기념사에서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로 요구했던 6·10과 10·4 등 양대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즉,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양대 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 추상적으로 기존 ‘합의 정신’ 존중만 밝혔을 뿐 ‘합의’ 자체를 존중한다는 분명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는 ‘합의’ 존중을 명시하여 북한의 요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화 제의로만 한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북한에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은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희떠운(행동이나 말이 실속이 없고 매우 거만하고 건방진) 소리’로 평가하며, 거부했다. 오히려 그동안 주장하던 양대 선언 이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만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로’라고 했다. 요 며칠 사이에는 개성공단 위축 조치로 보일 수 있는 노동세척과 작업환경 기준 강화를 밝혔고, 5일에는 동해 영공 주변을 비행하는 한국 민항기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대통령까지 나선 거듭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까? 정말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에는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장하는 것일까?

누차 말해 왔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화 제의의 진정성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제의를 북한이 묵살해왔던 것도 맞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왜 만들어졌고, 왜 자주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부끼리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하는 제의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수용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며, 돌아서서는 상대를 무시하고, 적대하며, 모욕감을 준다면 그 대화 제의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명박 당선자가 북한에 보낸 첫 메시지는 ‘통일부 폐지’였다. 북한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대통령은 ‘세끼 밥도 못 먹이는 사회주의’라며 상대를 모욕했다. 통일부 장관도 북핵 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없다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나서서 훼손했으며, 집권당 대표는 아예 ‘10·4 선언은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작게 5029를 들먹이며 돌발사태시 무력 점령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이 계획에 의거한다고 의심할만한 대대적인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화 제의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에서 ‘합의 정신’이 아닌 ‘합의 사항’ 존중을 언급한 것은 진일보한 제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자 청와대 참모진은 ‘사항’이나 ‘정신’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집권당 역시 북한이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지도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3일에는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여 북한의 자국과 불신을 자초하고,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가 기념절의 기념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집권당과도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불협화음이 마치 사전에 짜놓은 듯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을 갖춘 제의라기보다 대내외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다는 시늉만 보이기 위한, 말뿐인 제의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녕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보여주기식 시늉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화답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행동으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넘기 어렵다는 보릿고개가 코앞에 있다. 작년에 예년에 없는 풍작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이나 국제농업기구(FAO)가 밝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게다가 이제 곧 영농철이다. 비료나 못자리용 비닐 등 영농자재는 때를 놓치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농자재 지원을 협의할 실무자급 회담부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정해 제의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 빠진, 추상적인 대화 제의가 하나마나한 것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화부터 제의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집권당의 부적절한 발언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무색하게 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오해를 자극할, 그래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게 할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하루도 못 돼 우습게 만든 청와대 관계자에게 엄중히 경고함과 함께 북한의 상투적인 비난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집권당에게도 자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 제의라기 보다는 그것의 진정성이다.

제30호 목 차

이주의 칼럼

10년 남북경협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2

이주의 주요 기사

MB "남북 합의사항 존중... 빠른 시일내 대화해야	3
현인택 "남북관계 어려움 충분히 극복"	4
北 조평통, 李대통령 3.1절 기념사 비난	5
"유럽기업들, 원가 낮추려 대북투자 관심 증대"	6
정부 "개성공단관리위 통해 북측과 협의 노력할 것"	7
'간간한' 개성공단 규제..."北제재 대책마련 시급"	8
대북 에너지 지원 곧 중단 北 반응 주목	9
24일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남북 등5국 참여	10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11
対北朝鮮外交で蓮池透氏「対話を」超党派議連の会合で	11
추천논문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사)남북물류포럼 제31회 조찬 간담회

▶주제: 금강산 관광의 과거 현재 미래

▶일시 : 2009년 03월 10일(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3층 장미홀

● 2009년 제1차 민화협 정책 토론회

▶주제: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일시 : 2009년 03월 12일(목)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시대정신 공동 포럼

▶주제: 김정일의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

▶일시 : 2009년 03월 12일(목) 14:00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이 주의 칼럼

10년 남북경협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독재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류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경제협력이란 견인카드가 우선 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를 창출하는 '평화사업'이면서 동시에 '경제사업'으로, 남북 간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등 물리적 통일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해나가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남북경협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제협력 확대 자체에 목적을 둔 이른바 '묻지마 경협 확대', 조건 없는 '선공후득(先供後得)'을 순진하게 기대한 것이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핵·개방·3000' 정책을 근간으로 이른바 퍼주기식 교류협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극단적인 언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경협을 훼손하고 있어 우려된다. 남북 간 경색 국면 지속으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800여 대북 기업이 불안과 함께 사업적으로 부

도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을 믿고 투자한 대북 기업들이 무슨 죄인지 남북 당국에 묻고 싶다.

대북 전문가와 기업들은 정부 일각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시빗거리와 빌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남북 경협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두 정부의 지나친 좌편향적인 대북정책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현 정부의 지나친 우편향적 정책과 자극적인 언행도 경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한 대화 제의를 북한이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단절에 따른 남북 대치 국면은 상당 기간 악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은 사실상 부도 위기나 사업 중단 사태로 이어져 투자 및 영업 손실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늦기 전에 남북은 경협 관련 합의사항 존중과 정경 분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상생의 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경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협력은 경제논리를 존중하면서 지속성이 보장돼야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공든 남북 경협을 살리는 길이 남북관계에 있어 실용주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 글의 원문은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04/200903040386.as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 "남북 합의사항 존중... 빠른 시일내 대화해야

-- 3월 01일 노컷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9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평화적 공존·공영이라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 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며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北, 10년만에 3.1절 기념행사 개최

-- 3월 01일 연합뉴스

북한은 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3.1절 9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미.일에 대한 "징벌"과 "값비싼 대가"를 호언장담했다.

북한에서 3.1절 기념 보고회는 지난 1999년 8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이다.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보고자로서 나서 "오늘 우리 앞에는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남한을 비롯한 해외 각계 동포들이 "사대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며 외세를 추종하는 "반역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미.일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남한을 겨냥, "우리 군대와 인민은 외세와 결탁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반민족적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적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소동과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과 전쟁장비를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 호전세력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와 원칙적 입장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강력한 선군총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어 "일본 반동들이 우리 민족과 시대의 정당한 요구에 역행하여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시 정책과 재침책동에 계속 악랄하게 매달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 쌓인 적개심과 분노를 폭발시켜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받아 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북한은 3.1절 90돌을 맞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1만 5천명 예매

-- 3월 01일 아시아투데이

현대아산(대표 조건식)의 금강산 관광 예약판매가 보름 만에 목표치의 절반인 1만5000여명을 돌파했다.

현대아산은 지난달 13일부터 금강산 관광 예약 판매를 시작한 결과, 같은 달 28일까지 총1만5856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 관광사업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4월에는 기필코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아산은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된 후 1개월 내 출발하면 50%, 2개월 내에는 40%, 3~6개월 내에 가면 30%를 각각 할인해 줄 예정이다.

김영수 현대아산 부장은 "예매 기간 성수기 수준인 하루 평균 1000명이 몰렸으며 특히 2월 마지막 주에는 1만 2000여명이 신청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北 미사일, 민간교류에도 '불똥'

-- 3월 01일 연합뉴스

1일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민간의 평양 왕래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은 작년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조치'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축소된 틀 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까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의 못자리용 비닐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점이나 북측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청년학생본부 관계자들의 방북이 허가되지 않은 점 등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

명이다.

즉 정부가 정세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사업을 일률적으로 보류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대남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평소 1천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상주하는 개성공단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북·유엔사, 판문점서 장성급회담 개최

-- 3월 02일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2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했다. 이것은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만이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렸다"면서 "회담은 북한군 측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회담을 제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이 장성급회담의 재개를 요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를 수락했다면서 "장성급회담은 양측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사 측 참석자의 수석대표는 조니 와이너(공군소장) 유엔사 부참모장이며, 북측 수석대표의 이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회담이 종료되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장성택 남북경협 전면부상 왜?

-- 3월 02일 헤럴드경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 이후 북한 내 최고 실세로 부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수도건설부장이 최근 남북경협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계속되는 대남(對南)·대미(對美)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하반기 남북관계 경색국면 해소 및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남북경협시민연대의 김규철 대표 등 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 부장은 한달 반 전 '수도건설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 자리를 맡았다. 이 회사는 대외 종합무역회사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인 '평양 10만호 세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내각 소속의 민간 대남경협창구였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통일전선부를 거쳐 최근 행정·수도건설부 산하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세인 장성택이 대남 경협을 주도적으로 장악해 하반기 이후 남북 경협 활성화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최고실세인 장성택 부장이 대남 경협 창구를 직접관리함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5~6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경협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 남북관계 해빙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간의 대화 지속, 6자회담의 속도감 있는 진행, 남한 당국의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 등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현인택 "남북관계 어려움 충분히 극복"

-- 3월 02일 뉴시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지금도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으나 통일부가 지난 40년동안 경험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미 대세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큰 흐름을 보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발전적인 미래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은 존중하고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며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뤄야 한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북 공동체를 형성해 통일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고 서로 왕래와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며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고 북한도 머지않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北 수산업자에 어선 대여료 대폭 인상 왜?

-- 3월 02일 뉴시스

최근 들어 북한의 서해안 도발 위협 증가로 중국의 수산업자들이 북한 수산업자들에게 선박과 어구, 어업물자 대여비용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북한통신은 2일 "최근 북한 당국의 서해안 도발 위협이 늘어나자, 중국 수산업자들이 북한 수산업자들에게 대여료를 크게 인상해 80마력의 목선인 경우 기존에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2천 달러 인상하고, 꽃게 그물도 한 틀에 3천 달러에서 4,500달러로 올랐다"고 전했다.

식량과 기름, 밀가루 등 어업용 물자 가격도 올랐으며, 고기를 잡으러 한 번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인 1항차에 500달러하던 북한 국내 선박의 임대료도 800~1,000달러로 올라 북한 수산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통신은 중국 수산업자들이 대여료 인상 명분을 북한 수산업자들의 신용 문제와 수산 자원 감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어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선박, 어구 등 어업물자를 대여받아 꽃게와 조개잡이로 북한 내 공급과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체 면적의 35%, 자연재해에 '취약'

-- 3월 03일 뉴시스

북한 전체 면적의 35%인 4만2600km²가 자연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황해도 지역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북한의 토지이용, 강우, 지형, 토양, 과거 재해 이력, 사회 등의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자연재해취약지도'를 작성했다. 취약지도는 위험도별로 '안정', '다소 안정', '보통', '다소 취약', '취약'의 5등급으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북한 전체 면적(12만1517km²)의 12.33%에 달하는 1만4978km²가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했으며, 다소 취약한 지역은 22.76%(2만7654km²)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은 13.45%(1만6350km²), 다소 안정은 33.68%(4만0932km²), 안정은 17.78%(2만1603km²)를 차지했다.

행정구역별로 재해취약도가 높은 지역은 남포,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우선 순위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경협 사업 대상지의 경우 상당 지역이 재해취약지

역에 위치하며 평양과 남포, 개성 등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됐다.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림 훼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북한이 오랜 기간 식량난과 에너지를 겪으면서 다락밭 건설과 댐감 마련 등으로 산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산림의 해재 완충능 또한 약해져 거의 매해 홍수 재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北 조평통, 李대통령 3.1절 기념사 비난

-- 3월 03일 뉴시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조건 없는 대화와 남북 합의 존중 의사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했다.

3일 북한 중앙 방송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3.1절 기념사에서 응당 규탄해야 할 일본의 역사적 죄행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푼수(분수)에 맞지 않게 북남관계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걸고드는 망발을 채웠는가 하면 평화적 공존, 공영이니 협력이니, 조건 없는 대화니 하는 따위의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특히 "동족을 겨냥한 미국의 침략적인 핵무기와 핵미사일은 두둔하고 그것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고 "평화적인 인공 위성까지 미사일 발사니 뭐니 하고 시비하는 그런 추악한 천하역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한 남측의 태도 및 키리졸브 훈련 실시 등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평통 대변인은 "더욱이 동족을 적으로 삼고 북남합의들을 휴지장으로 만든 매국역도가 그 무슨 합의사항 존중이니 공존번영이니 대화니 하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역겨운 궤변이고 민족에 대한 참을 수 벗는 우롱"이라며 "이는 반통일 선언인 비핵·개방·3000의 북사판에 불과하고 역도(이명박 대통령)가 늘 입버릇처럼 떠드는 진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이번 망발을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고 폄하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우리 인민은 이명박 역도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은지 오래다"며 "북남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선을 그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어리석은 놀음에 부질없이 매달리지 말고 남조선 인민들과 온 겨레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정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북남관계 정상화의 출로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참사, “핸드폰 없으니 편하다는 말 알겠다”

-- 3월 04일 연합뉴스

"남측 분들이 '핸드폰이 없으니 편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핸드폰 벨이 수시로 울리는 바람에 식사도 중 몇차례나 왔다 갔다 하던 북측 참사가 한 말이라고 지난달말 평양을 다녀온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의 엄주현 사무국장이 소개했다.

엄 국장은 "우리를 상대한 북측 참사가 우리가 이전에 북한에 도착하면 공항에 핸드폰을 맡겨 놓고 난 뒤 하던 말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했다"며 "북한 핸드폰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디자인이 비슷하더라"고 전했다.

지난달 25-28일 평양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신축현장을 다녀온 엄 국장은 4일 "작년 10월후 4개월만의 방북이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민간 지원단체에 대한 북측의 '우호적' 태도를 강조했다.

다만 "북측 관계자들은 서로 반목하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본 때문인지 지원 물자를 빨리 보내줬으면 하는 눈치였다"고 엄 국장은 덧붙였다.

집중적으로 같은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른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긴장한 가운데서도 "민간단체들이 계속 방북해 지원하는 데 대해 북측 관계자들은 고마워하며 우호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유엔 對北인권 발언 한층 높아져

-- 3월 04일 한국일보

정부는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북한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 중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난해에는 없던 '심각한(dire)'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인권조약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긴 했지만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유럽기업들, 원가 낮추려 대북투자 관심 증대”

-- 3월 04일 연합뉴스

유럽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사업과 투자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제품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때문에 유럽 기업들의 대북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큰 특수를 맞을 전망이라고 네덜란드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가 주장했다.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의 북한 방문을 조직해온 네덜란드 GPI컨설팅사의 치아 대표는 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 기업들은 특히 값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의류와 농산물 산업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도 유럽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방북한 유럽 사업단이 이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GPI컨설팅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특히 북한 관리들도 참석해 북한 상법과 규제, 경제상황 등을 설명한다고 RFA는 전했다.

치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진 유럽 기업들을 조직, 5월9일-16일 방북할 예정이다.

북한, 한국정부대표 인권발언에 강력 반발

-- 3월 04일 연합뉴스

북한은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측에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복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

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개성공단 노동세칙 일방통보

-- 3월 04일 헤럴드경제

고환율과 실물경기 침체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체불시 강력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노동세칙을 임의 개정, 일방적으로 입주 업체들에게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측은 임금체불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메기고 영업정지까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사업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300%를 추가 지급하라고 강요해 가뜰이나 불경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입주업체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4일 실태조사에 착수, 과도한 제재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북한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4일 남북경협시민연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2월 입주기업에 일방 통보한 '개정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에서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약 300만원)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로자에 기본급의 300% 추가지급 등의 방침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경기침체로 주문량은 대폭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 냉각속 北 무역액 22% 증가

-- 3월 04일 헤럴드경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의 무역규모가 22%나 증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남북경협이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북한의 대외경제는 무역과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경제가 확대된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전체 무역액은 전년 대비 21.8%(8억달러가량) 증가한 44억894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적자폭은 43.9%(22억58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총액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과 EU로 중국이 전체 북한 무역액의 62.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대(對)EU 수입액이 1억8350만달러로 무려 224% 증가했다. EU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펄프와 폐지가 3500% 늘어났다.

또 북한의 지난해 외자유치액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일부 해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노력, 북한 내부의 소비계층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2007년 북한의 외자유치액은 5300만달러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원조는 한국의 식량지원 중단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20만t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KIEP는 올해 북한의 대외경제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로 ▷북·중 경제협력 수준 ▷북한과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관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 간의 관계개선 여부를 꼽았다.

정부 "개성공단관리위 통해 북측과 협의 노력할 것"

-- 3월 05일 헤럴드경제

정부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 남측 기업에 부당 노동세칙을 일방 통보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의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성공단관리위 측에서 계속해서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이 꼭 성공하고 발전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관리위원회가 노동세칙에 대해 남북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 총국에 전달했고 중국에서도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연말 입주기업에 일방 통보한 '개정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에서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약 300만원)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로자에 기본급의 300% 추가지급 등의 방침을 전달했다.

북, 이번엔 개성공단 업체에 환경개선명령

-- 3월 05일 헤럴드경제

북한이 지난 연말 개성공단 남측 기업들에 임금체불 시 벌금·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일방통보한 데 이어 최근 한 입주기업에 '작업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부 공정을 중

단토록 '환경개선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현재 공정 일부를 중단한 상태며 북측은 수시로 업체들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남북경협시민연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지도총국)은 최근 환경문제를 내세워 남측 한 금속 도금 업체에 '환경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공정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도총국 관계자가 수시로 입주업체를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은 추가 시설투자 등에 굉장한 압박감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환경개선 요구 배경과 관련,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근로자 환경과 건강관리·생활보장 제도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측 기업들의 임금체불 현황 및 북측의 제재에 대해 본격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발언에 미묘한 변화기류

-- 3월 05일 연합뉴스

남북관계 '현실론'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발언이 최근 잇달아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합의에는 6.15, 10.4선언도 포함된다"고 밝힌 뒤 '남북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종전 입장과의 차이에 대해 "늑장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호주의 유력지인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4일자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따른 북한 체제의 안정성 문제, 후계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아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남북 대화를 하고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입장 변화로 보긴 어렵지만 대북 메시지 측면에서는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의 진정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측면이 감안된 발언이라는 애기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 메시지를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보거나 식량지원 및 구체적 회담 재개

와 같은 '후속 액션'에 앞선 사전 포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원칙있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모종의 '히든카드'를 통한 대대적인 대북 접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간간한’ 개성공단 규제...“北제재 대책마련 시급”

-- 3월 05일 노컷뉴스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등 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발언 이후 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한 개성공단 조사단 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김 중장이 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건강관리 등 생활보장제도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개성공단 지도총국이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입주업체에 통보한 노동세칙에는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규정 위반 시 벌금 100~2천 달러를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에 대해 기본급의 300%를 추가지급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또 환경문제로 모 입주업체 관련공정을 중단시켰으며,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환경개선 지시를 내려 일부 업체들이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2.1 조치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 등과 관련해 정세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로 주문량이 대폭 줄어든 업체들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율로 인건비를 포함해 유지, 관리비용 지불에 큰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北 대의원 선거, 궁금증 풀어줄까

-- 3월 05일 연합뉴스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8일 실시되는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687명(11기 기준)은 우리의 국회의원 격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노동자와 농민 등도 대거 노동당의 지명을 받아 단독 출마, 당선되는 제도로 실권을 갖기보다는 명예직에 가깝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실세들 대부분도 대의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북한의 권력 동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

▲김정은 등장 여부 =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월8일

셋째 아들인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후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과연 대의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다.

▲'장성택 후견' 세력 보장 여부 =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이은 '2인자'로 최근 북한의 일상적 국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얼마나 등장할지도 관심거리다.

▲물갈이 폭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북한 권력 핵심부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북한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한 북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의 교체 폭이나 세대교체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대남 일꾼' 운명 =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대남 일꾼' 다수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선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던 대남 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됐다는 관측이어서, 이것이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北 “동해 영공 주변 南민용기 안전 담보 못해

-- 3월 06일 서울신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우리는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미국과 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북한이 관제하는 비행정보 구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로를 긴급히 변경,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키로 했다.

북한, 유럽 재생에너지 선진기술 배운다

-- 3월 06일 노컷뉴스

북한 대표단이 유럽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 오는 11일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풍력 발전기를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해온 스위스의 비정부기구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 북한 담당자 부르크하르트 씨는 "북한 대표단이 독일의 후쉴름을 시작

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대학, 기업체, 풍력 발전소, 전문 기술학교 등을 방문해 유럽의 첨단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지난 1월 27일 영국을 방문해 유럽 의회 관계자에게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올해초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의회 대표단에 에너지 부족을 토로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을 통한 기술 이전과 교류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유엔군사령부와 의 제16차 장성급회담을 앞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입지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미가 키 리졸브 합동 군사훈련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장거리 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6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북 에너지지원 곧 중단. 北반응 주목

-- 3월 06일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라 제공되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이 곧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원이 완료되면 대북지원이 잠정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끝냈다.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조만간 불능화는 진행되는데 대북지원은 끊기는 상황을 맞게 돼 북한의 반발이 우려된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지원이 끊기면 북한이 불능화 중단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북한의 불능화 속도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北, 잇따른 ‘군사도발’ 강공 뒤에 식량지원 계산”(워싱턴포스트)

-- 3월 06일 뉴시스

북한의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동 밑바탕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6일 "북한이 군사적 강경책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에 힘입어 근근이 식량부족사태를 메워나갔지만, 최근 들어 핵무장,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도록 계속된 식량위기의 결과, 북한은 체제의 존립이 위협받을 만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부족의 문제는 비단 신체적 발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부족으로 인해 지적발달장애 위험에도 노출 돼 있는 상태다.

어린이들에게 지적발달 장애는 치명적인 문제로 북한이 향후 개방경제로 나아간다고 해도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어도 5500만 톤의 쌀과 곡물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한 외국기자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지금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북한의 달라진 실상을 전했다.

북한은 개방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근이 절정이던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공급해줄 수 없는 식량을 얻기 위한 물물교환이 성행하기 시작, 비공식적인 민간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는 수백만 명이 이러한 민간시장을 통해 목숨을 연명하게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민간시장을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 정부가 필요한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간시장은 식량을 통한 북한 정부의 주민 장악력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원조의 약 30% 정도가 빼돌려져 이러한 민간시장에 유통됐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유엔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대해 "지나가 이미 병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북한연감, 2004년 현재 인구 2361만 명으로 기재

-- 3월 06일 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2008년판 연감은 인구를 전년판과 마찬가지로 2004년 현재 2361만2000명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교도 통신이 입수한 북한연감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중앙통신 연감의 2004년판에서 2006년판까진 2001년 시점의 인구를 게재했었다.

2007년 발생한 일과 통계 등을 담은 2008년판 연감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시대를 연 의미 깊은 해였다'고 지적했다.

같은해 12월 한국 대선에서 현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한 사실은 연표에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연감은 대미관계에 관해선 북핵 6자회담과 미-북한 협의의 경과를 기재하면서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난했다.

대일관계에 대해 연감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등 양측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24일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남북 등5국 참여

-- 3월 07일 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10차 광두만개발(GTI.Great Tumen Initiative)회의를 24,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UNDP의 두만강개발사무국 주수 대변인이 RFA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2007년 11월 러시아 회의 이후 1년 4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 첫날엔 25명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이튿날엔 투자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GTI는 두만강 인근 지역인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옌지, 러시아의 나홉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5년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UNDP와 참여국들은 2007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대상지역 범위를 한국의 동해안과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포함토록 광역화하고 이름도 현재의 '광두만개발'로 변경했다.

이 사업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재화를 북한의 항구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라진과 선봉 등 북한의 동북지역 항구개발 사업이 포함된다.

North Korea ends registration for upcoming election

북한의 다가오는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 3월 05일 Asia One /AFP

출처 <http://news.asiaone.com/News/Latest%2BNews/Asia/Story/A1Story20090305-126341.html>

North Korea has completed candidate registration for up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which are seen by some analysts as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eventual power transition.

"Servicepersons, workers, farmers and intellectuals" who have devotedly worked for the party, country, people and leader Kim Jong-II were nominated,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said early Thursday.

The agency, quoting an election committee report, said "the entire electorate" expressed conviction that the nominees "would devote themselves to the sacred struggle to strengt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firmly defend the socialist system and build a great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

The outcome of Sunday's election to the rubber-stamp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doubt. Candidates are picked by the government or the ruling communist party, and only one runs in each seat.

In the last election in 2003, official media boasted a 99.9-percent voter turnout and 100-percent support for every candidate.

북한의 다가오는 의회(최고인민회의) 선거(일부 분석가에 의하면 점진적인 권력 이양의 초석이 될 의회)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지도자 김정일이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목요일에 전했다. 통신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모든 유권자는 후보자들이 정부와 사회주의 그리고 국가에 헌신할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요일 선거의 결과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후보자는 당과 정부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며, 한 의석에 한 후보자만이 등록되었다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핵협상?

-- 3월 01일 Daily times

출처 http://www.dailytimes.com.pk/default.asp?page=2009%5C03%5C01%5Cstory_1-3-2009_pg3_6

At the current glacial pace of the negotiations, we're unlikely to see a denuclearised North Korea before Obama leaves office, even if he is re-elected in 2012. Of course, there's one sure way to jump-start the negotiation process: Send Hillary Clinton to Pyongyang

With US spy satellites focused on North Korea for the announced launch of a satellite aboar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Alaska, the idea of a nuclear deal with Pyongyang may seem remote. But that would be a hasty conclusion. The long-range missile test may well be North Korea's habitual way of seeking attention and getting an invitation to talk.

It's not that Washington does not want to talk, but it will be difficult to deliver what North Korea wants

— US recognition and massive economic aid and dissolution of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in exchange for a promise of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me.

Indeed during her recent visit to Asia,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uggested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adopt a balanced approach that combines multilateral talks with bilateral engagement with Pyongyang. The challenge will be to get the other key players to support this strategy.....

현재의 대북 협상 추세로 판단할 시, 오바마가 재임하더라도 그의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를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협상의 진척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힐러리를 평양에 보내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당국이 천명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능력에 있는 인공위성 발사에 예의주시함에 따라 대북 핵협상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미국의) 주의를 끌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하는 습관적인 것이다...

対北朝鮮外交で蓮池透氏「対話を」 超党派議連の会合で 하스이케 토오루, 대북 외교 「대화를」, 「초당파의원연맹」 모임에서

-- 3월 05일 니혼게이지아이

超党派の「日朝国交正常化推進議員連盟」(山崎拓会長)の3日の会合に拉致被害者家族会副代表の蓮池透氏が出席した。蓮池氏は「北朝鮮の怒りと憎しみの原因はどこにあるのか日本政府は考える必要がある。柔軟な対応が必要な時代にきている」と述べ、対北朝鮮外交で「対話」を進めるべきだと強調した。

蓮池氏は北朝鮮に拉致された横田めぐみさんの両親と、めぐみさんの娘キム・ヘギョンさんの面会の早期実現も提案。山崎会長は「議連として、面会実現の可能性を模索していきたい」と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

남치 피해자 가족회 부대표 하스이케 토오루씨가 3일 초당파 「일·조 국교정상화 추진의원연맹」(회장 야마자키 타쿠)의 모임에 참석했다. 하스이케씨는 「일본 정부는 조선의 분노와 미움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며, 「대화」로 대조선외교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이케씨는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씨 부모와 메구미의 딸 김혜경의 면회의 조기 실현도 제안. 야마자키 회장은 「의원연맹은 면회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고 싶다」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추천 논문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원)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한의 무역과 투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액은 전년대비 약 8억 달러, 21.8% 증가한 44억 8,940만 달러였으며, 무역적자도 43.9% 증가한 22억 5,8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체 투자유치 규모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적성국 교역금지 대상국 삭제와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북한 당국의 투자 유치 노력, 북한 내부의 소비재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자유치액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2008년도 대북원조도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대비 65.8%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북한에게는 원조에서 한국을 대체할 지원국이 없기 때문이다.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북·중 경제협력 수준과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관계개선 여부 및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중 수교 60주년이라는 점과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북·미 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의 변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북한의 대외경제 규모는 다음 세 가지 상황전개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다.

▶ 상황전개 1 : 북·중 경제협력의 한층 강화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이 경우 중국이 지난 2월 5일에 발표한 대북 무상원조 계

획이 산업시설지원과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하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13~26%가량 증가한 51억~56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유치는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외적인 조건이 호전되더라도 당장 급증하는 양상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모로 본다면 투자유치는 약 4억~7억 달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전개 2 :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 전개

대외경제 환경이 호전되더라도 북한 내부의 열악한 생산 환경과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외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도 대외무역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하여 45억 달러~50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 및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도 2008년 수준이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전개 3 :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악화

북핵문제가 심화되어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북경제제재는 전면봉쇄 수준이 되어, 무역·투자유치·지원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대북지원의 규모마저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이 글의 원문은 http://www.kl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8347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펜티엄-4'가 대세. 운영체제는 '붉은 별'

○ 열린북한통신은 최근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이 국가보위부 전파 관리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컴퓨터 CPU 대부분이 펜티엄-4이며, 프린터는 개인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컴퓨터들의 운영체제를 '붉은 별'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北, 농촌 집주변 과수 5그루 심기 운동

○ 북한은 3월 2일 '식수질'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무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모든 산들을 사철 푸르게 하는 것은 오늘 산림조성 사업에서 우리당이 내세우는 중요한 요구"라고 거듭 강조하고 용재림,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 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것과 농촌에서 집주변에 과일나무 5그루이상 심기 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